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의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결정은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긴급상황에 따른 임시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직업안전보건법 규정을 근거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직장 안팎 모두에 존재하므로 ‘직장 관련 위험’이라기보다 ‘보편적 위험’이고, 직장 내 위험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OSHA에게 보편적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보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OSHA의 행정명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시행의 중지를 명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피고인 아닌 자의 유죄인정 진술의 증거능력> 결정은 미연방헌법 수정 제6조에 규정된 증인대면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의 법정 외 진술과 관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특별히 보장되는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증인대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핵실험 피해 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 추정 반복 규정의 소급적용> 결정은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핵실험 피해보상 관련 법률은 특정 기간·지역에 거주한 경우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2018년 법 개정시 노출된 방사선 연간 투여량이 임계치 이하인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법 개정 이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번복에 관한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을 소급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정폭력 관련 국가의 적극적 의무> 결정은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침해와 관련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신청인들은 러시아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구제책의 미비로 인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협약 위반의 기저에 있는 국내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범결정(pilot judgement)을 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에서는 국가별 헌법재판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권재판소들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호에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를 소개한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주 인권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치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장애인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에 있어 치료의 우선순위와 장애인 보호가 문제된 최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과 이에 대한 각 분야의 반응을 소개하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확진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중증도 분류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중증도 분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독일 의료계, 정부 및 정치권은 이 결정을 존중하여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멕시코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급요건으로서의 최저소득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위헌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및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사회보장 수급요건을 정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소득 요건만을 규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